

KNSI REPORT

컨퍼런스

<제 20회 코리아포럼 녹취록>

한미FTA 재협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시 : 2009년 3월 18일(수) 15:00-16:30 / 장소 : 한글회관 강당

- 한미FTA 재협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 사회: 신범철(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 ▶ 발표: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 토론: 김종걸(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이정희(민주노동당/ 18대 국회의원)
최재천(법무법인 한강 대표/ 17대 국회의원)
- 주최: 국제통상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한반도재단

KNSI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Korea National Strategy Institute

※코리아연구원은 회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회비 및 기부금으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부문에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02-733-3348)나 홈페이지(www.knsi.org)에서 후원 및 회원등록이 가능하며,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범철 : 오늘 이해영 교수님이 발제를 하셔서 제가 피치 못하게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회자로서 최소한 중립을 지키고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첫 발제자로 한신대 이해영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해영 : 반갑습니다. 신범철 교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새로운 것이 없는거죠. 오래전이라고 한다면 오바마 대통령 개인으로 보더라도 2007년 6월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오바마가 ‘FTA반대’라는 입장표명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원의원 시절의 발언 내용들이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정확하게 되풀이 되었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그 입장은 여전히 미 국무성, 미 무역대표부, 각종 미 행정부 통로를 통해서 재확인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2007년 6월에(지금으로 따지면 2년 전이죠 벌써) 확인되었던 입장들이 재확인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자료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내에서 나왔던 관련 자료들이(물론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주요한 자료는) 이미 (국내에)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그냥 보시기만 해도 ‘아, 이런 입장이었구나’ 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외교통상부는 ‘미국이 설마 그러겠느냐’, 작년말까지만해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또 정부측에 가까운 전문가들조차도 ‘설마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도 정부 측, 혹은 그와 가까운 분들은 ‘재협상 그걸 요구하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아직도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2년 전에 확인되었던 이야기들이 아직 2년이 지난 이 시간에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외교력의 현주소가 어떠하며, 그런 외교력을 가지고 협상한 한미FTA가 어떨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이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 정도면 한-EU FTA가 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량의 한미 FTA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들(자료집에 제가 표로 정리해두었습니다.)중 예를 들면, ISD문제 같은 것 (ISD에 관한한 오바마 대통령 자신도 법학자이지 않습니까? 시카고 로스쿨에서 헌법학을 강의했던 사람이니까. 오바마 자신도 ISD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은 빠져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FTA라고 하는 프레임이 다시금 한-EU FTA에서도 또 확인되고 있다는 점은 사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나 시민사회가 한-EU FTA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도 시급히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미 작년 국회 비상시국회의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주이고, 그 이후에(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새로운 사실들을 제가 다시 정리 했습니다. 우선, 주요한 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특히 3월 9일, 론 커크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미 의회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미 국내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내용인 즉, 한미 FTA가 "In case of status quo, It's not acceptable" 이렇게 되어있고, 2008년 Annual Report(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통상의제 보고서)에서는 ‘콜롬비아와 한국과의 FTA 관련해서 진전을 위한 기준(benchmarks)을 정할 계획이다.’ 처음에 이게 보

도가 된 다음에 ‘benchmarks’ 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가지고 저희들 사이에서도 꽤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3월 9일자 커크 인준 청문회 서면자료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해결될 필요가 있는 다른 쟁점이 있다는 생각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나는 한미FTA를 generally(전반적으로) 지지한다.’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국내언론에서는 ‘커크 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터무니없는 착각입니다.

이 문장을 읽어보시면, 커크가 오락가락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한미FTA를 자기는 지지하는데 이 상태로는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제기한 Stabenow(스테비노우)라는 상원의원은 굉장히 진보적인 의원입니다. 한국의 노동상황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한미FTA 당시부터 일관되게 문제제기를 해온, 대표적인 민주당의 진보파 의원인데, 자동차만 문제냐, 예를 들어 투자조항도 문제고, 다른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커크 대표가 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나는 협정문을 지지하는 편이라고 답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국내 언론에서는 오락가락 했다(한편으로는 지지하고, 한편에서는 못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 6월에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오바마가 발언한 내용이 뭐냐면 ‘한미FTA는 이 형태로는(in a current form) 반대다’ 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2년 전에 오바마가 했던 발언이 다시금 사람이 바뀌어서 오바마의 각료인 USTR대표가 표현만 바뀌었지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거죠. 뭐냐면 ‘이 형태로는(In case of status quo), 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걸 정확하게 (대통령) 오바마의 생각입니다. 그걸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바마가 상원의원시절에 정리했던 ‘in a current form, 이 형태로는 한미FTA 난 반대다’ 이 정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당시 2년 전에 in a current form이라고 했을 때, 오바마가 지적했던 것이 쇠고기, 자동차, 쌀 이었어요. (뒤에 보면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오바마 당시 상원의원이 축하인사를 하면서 언급한 내용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힐러리 국무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이 지금(present) 형태로는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형태의 FTA는 미국으로서는 못 받아들인다하는 것은 적어도 오바마로서는 이미 2년 전부터 답이 나와 있는 문제라고 하는거죠.

그래서 방법론과 관련해서 이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아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하단에 상원의 보커스 의원의 발언을 보시면, ‘쇠고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에 ‘이 문제를 top priority(최우선 순위)로 두겠다.’ 라고 커크 지명자가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한미FTA협상에 들어갈 때 4가지 선결조건을 미국이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서 미 의회가 또 다른 선결조건을 내건 셈이다. 그래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2의 선결조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1일자 로이터 통신에(우리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레빈 무역소위 위원장이 benchmarks와 관련해서 발언한 것을 보면, 자동차를 언급하면서 ‘2.5% 관세, 즉시철폐 대신 15년 뒤에 하자.’(한국산 자동차를 미국에 팔 때, 수입관세 2.5% 즉시철폐라는 한미FTA 현 협정문의 내용에 대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benchmarks의 핵심은 ‘즉시철폐는 안된다, 15년 뒤에 하자’라는 핵심입니다. 미 상원은 쇠고기, 하원은 자동차 수입관세 즉시철폐대신 15년 뒤 철폐로 하자는 것이 또 다른 선결과제이고, 일종의 benchmarks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미국 의회 내에서 특히, (2008년에 발의되었다가 통과가 안 되고, 2009년에 재발의 될 내용인)미국의 2009년 통상법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진보적인 내용들이 많고, 그 다음에는 한미FTA 협정문에 들어있는 독소조항들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미국의 재협상 요구와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는 ‘renegotiation’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과 관계없이 분명히 (이 재협상은)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한편으로 그렇습니다. 미국이 한미FTA 재협상 내지 그 비슷한 것을 요구할 때, 만일 우리가 여기에 반대할 경우 우리는 당장 ‘한미FTA의 협상문을 어떻게 만들었길래, 정부가 한 지금의 한미FTA가 얼마나 잘된 협상이길래 저사람들이 재협상을 반대할까’라는 딜레마에 봉착합니다. 한미FTA도 반대하고 한미FTA 재협상도 반대할 경우의 딜레마라는 것이죠. 반면에, 일부 보수언론들이 이미 작년부터 재협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외통부만 모르는 척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향후 제기될 미국의 재협상요구를 반대할 경우, 한편으로 실패한 협정인 한미FTA를 결과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 결국 정부가 재협상을 할 경우 추가적인 선결조건마저 또 수용하게 되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방법은 앞으로 치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특히, 독소조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의회/시민사회와 비상시국회의를 중심으로 한 우리 국회/시민사회가 의원외교 차원에서, 혹은 시민사회 사이의 연대 - 이것을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라고 부릅니다- 차원에서 새롭게 재협상을 추동해서, 이 독소조항들을 걸러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일종의 대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범철 : 이 교수님께서 스스로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이해영 교수님 말씀 중에서 자동차부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는데요, 재협상을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나올까에 대한 이야기가 그 전에는 없었는데, 서서히 재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협상은 필히 할 것이라고 과거에도 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새로울 것이 없다는 말이었는데, 우리정부는 ‘재협상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미국 대통령이 재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것을 한국 국회에서 비준한다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 발언을 취소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그런 경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재협상이든 어떤 말로 하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대선 시기부터 얘기 했고, 현 대통령으로서 얘기 했는데 그 말을 지키지 않고 취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걱정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양대 김종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김종걸 : 안녕하세요. 한양대 김종걸입니다. 이해영 교수님이 오바마 이후에 미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특히 오바마의 민주당이 한미FTA에 대해 어떤 태도를 계속 해왔는가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사고체계에 입각해서 추진했던 한미FTA의 협정문 체계는 지금의 국제경제상황과 각 나라가 취하고 있는 대응방식 즉, 일정정도 경제를 제어해 나가고 규제를 새롭게 설정하려는 노력에서 본다면 거의 누더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그냥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죠. 지금의 오바마 정권에서 재협상 요구가 왔을 때, 오바마정권이 (상대적으로) 협상에서 상당 정도 공동의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정권이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적극적인 재협상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재협상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글로벌 경제시스템, 혹은 금융시스템을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소위 G20 속에서도 이 주제는 상당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FTA의 재협상은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을 듯합니다. 시간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나름대로의 공정무역(Fair Trade)의 새로운 기준점을 세워 나가는 노력들이 지금부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재협상을 할 때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한미FTA의 상황들을 통상협상과 한미동맹을 좀 혼동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군사·안보 차원에서의 한미동맹의 중요성, 그리고 마치 한미FTA가 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상한 논리 속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2006년 2월 3일에 한미FTA 협상 개시를 축하하는 축하연에서 당시의 미국 통상대표부의 대표였던 롭 퍼트먼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였으며,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도 “바로 이 순간이 1953년 한미군사동맹을 맺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순간” 이라고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발언문과 모든 문건들 속에서 (특히,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 발언문 속에서는) 경제 얘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소위 한미동맹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한미FTA를 진행했을 때, 저희에게는 애초부터 협상할 여지가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미FTA에 대한 반대가 마치 한미동맹에 대한 반대로 비추어지고 선전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제부터 재협상을 할 때는 제발 한미동맹과 한미FTA는 좀 구별하였으면 합니다.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다 지켰으면 좋겠지만, 지켜야 할 것과 버릴 수도 있는 것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FTA라는 것은 경제적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고, 일정정도 국가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지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것만은 도저히 양보 못하겠다고 하는 최저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어떠한 FTA도 한국사회의 사회적 공공성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투자자정부제소권(ISD)과 같은 정부정책의 자율성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약품협상의 문제, 농업의 과도한 개방 등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한미FTA에 의해서 한국이 지향해야 할 지역구상이 완전히 엉망이 됐었다는 점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한미FTA 때문에, 그전까지 있었던 동아시아구상 혹은 동북아 구상 등이 완전히 방향성을 상실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미FTA를 새롭게 재협상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각종의 우리의 동아시아구상, 즉 한중일, 한중일+ASEAN, 한중일+ASEAN+인도·호주·뉴질랜드, 아니면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는 APEC 등에서 한국이 지향해야 할 지역구상과 연동시키는 형태의 협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장 최악의 경우는 아마 이해영 교수님 걱정하신대로, 현재의 협정문에서 쇠고기를 또 내주고, 또 자동차도 내주고, 쌀도 내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최소한 정부당국자의 양식을 믿는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터무니없는 결과는 안 나올 것이라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깨야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먼저 농업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번의 농업협상에서 쌀 외에는 모든 것들을 내준 상황이지요. 관세화 예외품목은 1,531개 품목 중 쌀 및 쌀관련제품 16개 품목으로서 전체의 1%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들은 전면적인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품협상 속에 있는 허가-특허연계라든가 하는 독소조항들도 다 없애야합니다. 국민들이 늙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약값의 급속한 상승을 초래할 현재의 협정문구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정부제소권(ISD)이라든가, 래칫(역진방지)조항이라든가 하는 정부정책의 자율성을 크게 손상시킬 조항들은 모두 없애야 합니다. 만약에 농업 및 약품, 그리고 ISD와 같은 정부정책의 자율성 제한조치만을 재협상을 통해서 다시 설정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기능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 정도 양보도 가능한 것이죠.

한국의 동아시아 지역구상과 관련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바마의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대한 구상들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요, 지금까지 부시정권에서 본다면, 하나는 동아시아에 대해서 양자간 FTA 협상을 해나가는 것, 두 번째는 APEC을 중심으로 기존에 있었던 각종 동아시아 구상들에 대해서 물타기 하는 것이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아시아지역과 FTA가 성공한 사례는 한국 밖에 없었고, 태국은 깨졌고, 말레이시아는 아직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 협상일정이 늘어지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양국간 FTA 추진과 함께, 처음에는 ASEAN+3을 중심으로 하다가 요즘은 ASEAN+3+인도·호주·뉴질랜드의 형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중·일 혹은 한·중·일+ASEAN의 형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미국 혹은 일본과의 대립구도가 명확히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이전에는 한중일 혹은 한중일+아세안의 지역구상을 가지고 있었습시다만, 한미FTA를 체결하고부터는 그 모든 구상이 일그러졌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중일 혹은 한중일+아세안의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의 낮은 단계의 FTA망을 구성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미국과의 높은 수준의 FTA를 맺은 후에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가령 미국에 대해서 ISD 등을 허용해 놓고, 중국에 대해서는 ISD를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꿈일 뿐이죠. 아직까지 산업정책적인 고려가 굉장히 강한 중국사회에 있어서 적어도 ISD같은 것들을 허용할 리가 없고, 미국에도 양보하고 중국에도 양보하는 것과 같은 협상을 우리의 국민들이 허용할 리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중국과의 FTA를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일본과의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농업을 거의 내준 상황에서, 일본과의 농업협상에서 더 이상 양보할 방법이 없게 된 것이죠.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 농업의 최대 수출시장이고요, 일본이 맺고 있는 그 어떤 FTA에서도 반 이상의 농업시장을 개방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과 효과적으로 FTA를 맺기 위해서는 원래 농업부분은 일부 양보하더라도 산업기술협력, 투자협력, 동아시아통합을 위한 한일간 협력 등의 아젠더를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했습시다만, 한미FTA 이후에는 그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즉 기존의 한미FTA협정문을 기준으로 하는 순간, 그동안 우리가 구상해왔던 한·중·일, 한·중, 한·일, 한·중·일+ASEAN 기타 등등 각종의 구상들은 모든 것이 일그러지고 깨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방식은 미국과의 FTA 협정문을 기준으로 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아무나 하고 FTA를 맺자는 일종의 ‘무전략’ 상황으로 변환된 것이죠. 하지만, 미국이 변하고 있으며, 그리고 소위 신자유주의 운영체제 자체도 무너지기 시작한 지금 상황들 속에서 과연 미국형의 경제구조를 일반화시키는 한미FTA가 유용한 전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지역공동의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더욱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면에서 한미FTA협정문 체계도 새로운 지역구상과 조화할 수 있는 형태로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낮은 농업개방정도, ISD나 래킷조항의 폐기 등은 새로운 동아시아판 FTA망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4분기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5.7%입니다. 물론 국제경제의 위기상황에 대한 패닉의 성격이 강합니다만, 만약에 그 수치를 1년간 연장시키면 2009년의 경제성장률은 -20%가 됩니다.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장률정체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미국을 계산해 보면 -6%에 불과합니다. 즉, 사고는 미국이 쳤는데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더욱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12.7%, 한국이 -20%,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4/4분기에만 -16%입니다. 이걸 1년으로 보면 (싱가포르는)날아가는 겁니다. 결국 동아시아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체제로 바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시 한 번 97년 이후에 우리가 고민해왔던 동아시아 공동체 혹은 동아시아 협력체 등의 논의가 절실히 필요로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목적과 배치될 수 있는 그 어떠한 협정문 체계(지금의 한미FTA)는 적극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범철 : 고맙습니다. 한미FTA 재협상 할 때 여러 가지 지켜야 할 부분들을 말씀해주셨는데, 들어보니까 제가 보기엔 이걸 다 지키려면 깨질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셨는데요, 말씀은 안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질서 재편성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편성해야 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다음에는 최재천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재천 : 최재천입니다. 보수언론들이 일반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미 FTA를 통과시키지 않아서 마치 미국과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거나 경제가 죽어있다거나 이런 식으로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미망에서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미FTA가 사실상 균형을 상실한 대단히 불합리한 FTA인데, 이것이 우리가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모든 FTA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점 또한 대단히 위험한 일인데, 그 점에 대한 염려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라도 염려를 던져 놓습니다.

재협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늘 재협상 없다고 그러니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더군요. “조금씩 뜯어고칠 바에는 차라리 새로 짓는 것이 낫다.” 전제가 틀렸죠. 이게 지금 멸절된 집입니까? 균형을 상실한 완전한 부실 주택입니다. 이걸 놔둬야 엉망이 돼서 저절로 무너질 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할 사항은 국회의 비준동의가 없는 무허가 건물이라는 점입니다. 무허가 건물이고, 부실 건물이란 말예요. 근데 이 집을 두고 마치 새집을 멸절하게 지어놓은 것처럼 이 집을 어떻게 허무느냐 이러는데, 비유나 전제 자체가 완벽하게 틀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철거될 운명이다. 이런 거죠.

정부가 ‘재협상은 없다.’ 라고 하는 말은 어찌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늘 그래왔으니까요. 실질적인 의미에서 재협상은 앞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재협상은 끝내 없다고 정부가 강변할 겁니다. 2007년 4월 초에 한미FTA 공식협상을 끝내놓고, 6월 최종서명하기 전까지 그 중간에 추가협약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본질에 가까운 재협상을 합니다. 환경·노동·의약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 행정부(부시행정부)와 미 의회(새롭게 정부를 장악한 민주당)가 타협을 해서 새로운 통상안을 만들죠. 그것을 한국정부에 강요하잖아요. 분명한 재협상인데, 당시 노무현 정부는 추가협약·재협약·부분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슬그머니 넘어갔었죠.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그런 제안들이 특별하게도 현재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한테서 나오고 있지요. 비밀협상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답답할 노릇이죠.

다음으로 이해영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은 불변입니다. FTA라는 총론은 동의하죠.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 중에도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FTA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아무도 없어요. 다 전반적으로는 동의 하는거죠. 구체적인 각론에 가서 반대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는 거죠. 누가 지금 쇄국을 지향합니까. 오바마는 2004년 상원의원 후보시절 (존 케리 대선후보 전당대회에 가서 연설로 뜨던 때)이미 공약으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당시 공화당 상원의

원 후보가 신랄하게 비난을 하죠. 하지만 오바마는 일관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아예 표면에 그 공약을 내세웁니다. 이번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캐나다에 다녀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상을 뒤엎고 환경이나 노동부분에 대한 NAFTA재협상을 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총론은 동의하되, 각론을 수정하겠다는 거죠.

어쩌면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2008년 미 민주당 법안 나오기 전에 2007년 추가협상을 통해 환경·노동·의약품 부문에 대한 재협상을 사실상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 부문만큼은 더 이상 (재협상을) 주장할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노동환경분야에 대한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이미 그걸 다 받아주었으니까요. 그래서 NAFTA와 같은 재협상 추가협상은 없다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입니다. 이 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선 쇠고기나 자동차가 있지요.

커크 USTR 대표 청문회나 미 상하원의원들 질의응답을 통해서 보면, 역시 우리가 맨 처음 한미 FTA를 시작할 당시 미국측이 요구했던 4대 선결과제에서 한 걸음도 못 벗어납니다. 스크린 쿼터나 약가 적정화 방안, 자동차와 쇠고기였는데, 스크린 쿼터는 이미 줘서 우리 국내 영화시장 점유율이 확 떨어져있고, 약가적정화 방안도 적절한 수준에서 처리해주었죠. 남아있는 건 쇠고기하고 자동차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직 해결 안 되었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한미FTA는 제대로 해내지도 못하면서, (비준동의조차 가지도 못했는데) 선결과제 4가지에서 여전히 허덕이고 있어요. 노무현 정부가 선물로 4대 선결과제를 줬는데, 그 네 가지에서 쇠고기하고 자동차문제가 남아 여전히 뼈격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입장도 여전히 그 부분을 완전히 해결해 달라는 것이고,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이상 한미FTA는 없다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의 일관된 태도라고 평가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한미 FTA에 대해 비판적인가? 공공의 영역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공기와 같은 공공재·의료행위와 같은 공공의 영역·수돗물과 같은 공공의 영역. 이런 것은 다 동의하잖아요. 그런데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의미하듯, 국가가 정책개입을 통해서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능들이 있잖아요. 건강보험 관련된 것들. 금융자유화와 관련된 것들, 이런 공공의 영역들이 지금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서 다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도 굳이 조사해왔습시다만, 잭 웰치 조차도 ‘주주자본주의 조치는 정말 우매한 짓이었다.’ 고 했고, IMF는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는 잘못됐었다.’ 고 했고, 신자유주의 천국인 영국에서 조차도 보수당이나 노동당을 떠나서 ‘워싱턴 컨센서스는 잘못 되었다, 시장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다(파이낸셜타임즈).’ 고 반성들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기존의 세계질서, 경제질서, 자본주의 질서, 무역질서, 금융질서에 대해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국가는 국내 정책에 대한 개입권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고, 또 공공의 영역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인데, 우리는 정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시효가 끝났다고 판결을 내리고, 잘못된 만큼 다른 쪽으로 전환들을 하는데, 우리는 상투 잡는 꼴이에요. 그래서 공공의 영역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우리가 한미 FTA를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저 재협상은 없다고 (정부가) 그러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국회입니다. 미국은 법률을 하나도 고치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30개 정도 고치겠다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저는 수용조항들·우리 법상의 간접수용까지 따지면, 100개도 넘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본시장통합법이나, 변호사 관련법 등은 FTA후속법률로 나가야 될 법률인데, 한미 FTA는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른바 모범은 놔두고 새끼 법률들은 국회가 통과 시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 정부는 금융시장의 자율화·투자자 우위·투자자로 대표되는 소유권 자본주의 절대화 등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반역사적·몰역사적 흐름이라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재협상해야하는가? 우리가 협상 시작할 때 주장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무역구제조치를 꼭 수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세인하는 서로 간에 당연한 것이고, 무역구제조치를 도와 달라는 것입니다. 처음 100을 원했다면 1조차도 얻지 못했던 분야가 무역구제조치예요. 미국은 1차·3차 산업을 파는 나라이고, 대한민국은 상품과 사람을 파는 나라 아닙니까? 상품을 팔아야하니까 무역 쪽(무역구제조치)을 얻어 내야죠. 무역구제조치를 얻어내는 쪽으로 재협상해야하는 건 분명합니다.

재협상 부분 둘째는 엇그제 제가 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발 뉴스를 보다가 좀 의아해 했는데, 지금 학비가 비싸고 미국 내 일자리 쿼터가 줄어드니까 유학생들이 귀국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합니다. 참고로 호주는 미·호 FTA와는 별도로 쿼터로 전문직 비자쿼터를 받아냈죠. 당시 우리 정부는 우리도 받아낼 것이다 기다려라, 김종훈 본부장은 내가 지금은 차마 말 못한다. 미국의회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밖에 못하지만, 사실상 약속돼있다고 얘기했었죠. 그 뒤에 협상했어요? 안했거든요. 만5천에서 2만정도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받아야 해요. 우리 전문가들을 외국에 보내서 일자리 만들어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근데 동아일보 기사는 엉뚱한 핑계를 댔지요. 한미 FTA하고는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고, 별도의 협상을 통해 도리어 연계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호주는 FTA하고 연계전략으로 전문직 비자쿼터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무역구제조치와 전문직비자쿼터를 받아내는 새로운 협상전략을 구사해야죠.

전체적인 균형이 흐트러져있으니까 우리도 새로운 균형을 잡자는 거죠. 그래서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협정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고, 투자자국가소송제가 얼마나 공공성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고쳐야 되는 것이고, 무역구제조치를 바래왔던 것이니까 그걸 만들어 내야 되고, 일자리를 팔아야 되는 것이니까 전문직비자쿼터제를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이 원했고, 기업이 원했고, 도리어 관변학자들이 원했던 수준, 정부가 자랑했던, 그 목표치로 가면 되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범철 : 최 변호사님 얘기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네요. 처음부터 걱정했던 문제를 종합적으로 많이 말씀해주셨는데요, 한미FTA에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 그 전에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법률개정의 문제라든지 아주 논리정연하게 다시 정돈하셨고요. 사실 요부분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최대 쟁점들이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잘 된 협상

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의원님 말씀을 들겠습니다.

이정희 : 저는 국회의 요즘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의 문제에서 1년을 거의 국회에서 보냈는데, 1년 동안 사실은 머리 쓴 일보다, 몸 쓴 일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대화와 타협과 논의보다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직권상정으로 협박하고, 거기에 대해 안된다고 농성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곤혹스러운 사정입니다.

또 하나는 FTA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시국회의 간사로 소개를 받았는데요. 시국회의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야당 중에서도 민주당, 민주노동당, 선진당, 창조한국당까지 다 포괄되어있는데, 민주당의 많은 분들께서 농업분야의 피해보전대책이 수립되면 그 다음에는 통과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외통위원장은 공식적으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의 대표단과 간사단이 외통위 간사회의 때 방문했더니,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농업분야 피해보전대책을 논의해서 외통위로 보내달라. 그것까지 받고 논의를 해서 FTA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겠다. 그것 말고 다른 요구는 받아들일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요구는 전면재검토·다른 관련 상임위에서 검토의견을 내야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었는데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3월 초 외통위 간사협의 때, 4월 임시국회 중에 국회법에 따라서 한미FTA비준동의안을 협의 처리하겠다는 잠정합의가 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다음날 민주당 최고지도부회의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잠정합의는 없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만, 상당히 불안한 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직전에 농업분야 피해보전대책만 나오면 외통위는 처리할 것이라는 외통위원장의 발언을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에서도 매우 곤혹스러운 지점에 있습니다. 17대 때 했던 것과 다른 점은 일단 그 때는 시민사회가 일정정도 활동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고, 또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자문단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자문단에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에 매우 큰 도움을 주고 계시지만, 당시와 같은 시민사회단체의 큰 움직임들이 지금은 별로 일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국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부진하면서 급하게 일방 상정되고, 법안 심의 통과되니까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일 일어나면 가서 항의하고 기자회견하고 이런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서, 실제로 국회 안에서 내용을 가지고 정부와 이야기를 해나가고 토론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들이 매우 부족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금 논의의 주제로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라, 다른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의 주제로 올릴 수 있을지조차 매우 불투명하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몇 가지 고민하면서 이해영 교수님의 글을 봤고요, 몇 가지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미국 민주당의 통상법 내용을 써주셨고, 그것이 일정한 공정한 무역의 원칙들을 거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또 달리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저희에게 부

딛히는 것들은 오히려 ISD나 Negative List라든가 이것에 대한 ‘우리 이거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해보자’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고, 기존의 한미FTA를 전제해 놓고, 그동안 미국이 제대로 따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자동차·쇠고기 다시하자. 이런 얘기들이 오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통상법이 얼마나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미국이 한국에 스스로 재협상을 안건으로 올리면서, 또 한국이 얘기하면 그것을 안건으로 올리는 것에 동의하면서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리 자신들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통상협상을 전면재검토 하겠다고 하더라도, 결국 한국에 대해서는 대단히 보호주의적인 색채를 가지고 기존에 한미FTA 해 놓은 것은 놓은 거고, 우리는 ISD 때문에 한국기업이 제소해서 미국이 큰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것은 없으니, (기존 한미FTA협정은 그대로 두고) 거기다 더해서 더 내나라. 이렇게 가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미국 민주당을 포함하여 미국이 얘기하는 재협상이 더 (불리하게), 결국 다 빼앗아 가겠다고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쟁점은 자동차와 쇠고기 일 것 이구요, 자동차산업이 미국도 무너지고 있지만, 한국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죠. 쌍용자동차 이미 절반이상, 회사 자체가 날아가는 상황에 와있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역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쇠고기가 협상의 의제로 올라온다면, 지난해 저희가 100일 동안 싸워서 얻어낸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안 받겠다는 것을 다시 논의의 주제로 올려서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대단히 가슴 아픈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재협상이라는 것은 미국이 요구하는 재협상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언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재협상은 다 빼앗아 가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재협상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재협상은 분명히 온 것이고요. 여기에 대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통상절차법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첫 단계는 이제 시작했습니다. 외통위에서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상정을 하고 논의를 해야 하는 단계인데요. 통상절차법을 빨리 만들지 않으면, 17대에 우리가 조문도 제대로 안 나오고 번역본도 제대로 안 나오고, 정보는 차단된 채 당했던 상황이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통상절차법을 먼저 만드는 것이 재협상 국면이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정부여당의 논리에 대한 정확한 반박을 교수님들께서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그거잖아요. 미국이 재협상 하자는데 빨리 들어가면 지금보다 훨씬 불리해진다. 그러니까 먼저 정착시켜놓고, 이걸 완전히 고정적 문구로 밀고 나가자는 얘기가 아예 마무리 재협상을 하자고 해도 일체 응답 없이 가만히 있는 것. 그것도 협상전략이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재협상 요구에 아예 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유용한 전략이라는 얘기를 정부에서 공공연

히 하고 있는데, 현재의 FTA가 정당하다고 보면 그렇겠죠. 근데 저희는 절대 거기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이니까 협상을 우리의 의제를 올리는 방식으로 협상을 조금 더 공세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제를 바꾸는 노력이 정부에게 (요구는 하겠지만,) 정부가 그것(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을 의제)을 올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제로 올릴)능력이 없고 (의제로 올릴)뻔심이 없는 정부라고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 상태로 양국의 국민들이 합의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그냥 끝내고 말아라. 이것이 현실의 구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것들이 재협상이 되어야 하느냐하는 문구를 정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은 미리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지금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독소조항을 놔두고는 절대로 비준 동의 못해준다. 라는 것으로 확고하게 정리되고, 그리고 이 이상 미국에 양보하는 굴욕적인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 라는 것으로 좀 더 분명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밖에 정치권, 야당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농업분야 보전대책 뿐만 아니라, 다른 점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고, 법에 의해서 필요한 보전대책은 실제 어느 정도 수준이다,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보전대책 차원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연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원래 FTA 문제를 두고 영향평가를 했었는데, 작년 12월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영향평가를) 다시 의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평가결과가 나오는 것도 일종의 시기만 조정하고 약간의 수치들을 조정해서 지금도 한미FTA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내용으로 나올 듯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사실은 국회 안에서 지내는 것이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합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얼마나 심각한 일이 아무런 통제 없이 벌어질지. 그래서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하나하나의 논리들을 차분하게 만들어 나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범철 : 이정희 의원님 말씀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미국의 재협상(요구)은 미국의 이익을 가지고 재협상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미FTA를 해서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것이 재협상의 카드로 나왔고요, 미국에 유리한 것들은 얘기가 안 나왔는데, 예를 들면 비관세철폐조항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작권 말고는 재협상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한미FTA가 관세철폐하고 비관세철폐의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비관세철폐는 미국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별로 없고요. 거기서 한 가지 아셔야 하는 부분들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무역에 대한 환상이나 맹신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는 한미FTA로 인해서 무역흑자폭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CF에서 자꾸 한미FTA를 하면 우리가 무역에서 유리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외에는 그런 결과가 나온 곳이 없어요. 그런데, 왜 미국에서 몇 가지 조항을 가지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냐면, 미국 전반적인 경제규모에 비해서 관세철폐로 인해서 미국이 얻는 이익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실제 한미FTA로 얻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쇠고기하고 자동차 부분을 더 손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만약에 재협상이 시작되면 우리정부가 유리하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제 얘기가 너무 길어졌군요. 플로어에서 질문받기 전에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교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영 :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이정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정부여당은 우리가 빨리 비준을 해놓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는데, 저는 굳이 그것을 원한다면 역설적인 의미에서 그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한미FTA는 영구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미관계의 법칙상, 절대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한국정부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스크린쿼터 운동하면서 어찌 보면 작다면 작은 사안 하나를 놓고 우리정부와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10년 가까이 지켜봐 왔는데요, 한미FTA와 같은 대형프로젝트의 경우 미국측도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압박이 들어 올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측 논리들이 바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공항에 미국측의 누가 왔다 가면 논리가 바뀌어요. 보수언론 논조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이고, 그러나 저는 요즘 갑자기 우리 정부와 정부여당이 자주과 같은데, - 언제 저 분들이 저렇게 ‘자주국가’를 강조했었는가 싶을 정도로 -, 물론 계속 가면 좋겠죠. 그럼 이런 논리도 필요 없고 한미FTA는 저절로 끝나는 거니까 뭐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009년 미국의 통상법 가능성인데, 지금 이 법안을 확고하게 지지할 것으로 보이는 의원의 수가 약 71명 정도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원이 435명이죠? 그 중의 70명이니 까. 그리고 대부분은 민주당의 최대계파인 진보파예요. 그런데 오바마는 여기 소속이 아닙니다. 아마 이 법안을 놓고, 미 의회진보파·시민사회·노동·환경이 한편이 되고, 미국 재계·공화당이 다른 한편이 돼서 힘 싸움이 벌어지겠죠. 오바마는 아마 중간에 있을 거예요. 오바마의 통치스타일로 보았을 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미FTA가 그때까지 통과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안이 (수정)통과가 된다면, 한미FTA의 상당부분과 충돌합니다. 그때 가서 재협상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비준동의하지 않고 우선 그냥 기다리는 것도 우리한테는 매우 좋은 전술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부 여당이 이렇게 ‘자주적으로’ 해주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2009년 올해 현재 미 의회 의사일정에 한미FTA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도 한미FTA는 미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범철 : 플로어에서 질문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KNSi**